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현황과 2020 년 발표 개정규정 소개

CTAC Vietnam

김일중 대표 회계사 (ilchung.kim@ctacgroup.com)

지난 20 년간의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경험을 통해서 이전가격의 과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된다.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가격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 20 년 전에 내가 처음 이전가격팀에서 일할 때에는 전혀 관심 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이전가격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에는 지금처럼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감사보고서를 밤새도록 숫자 하나하나 복사해서 엑셀서식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험을 통과해서 꿈이 많던 수습공인회계사들에게는 힘든 일만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전가격분야는 기피 대상이었고, 말만 들어도 멋진 기업인수합병 업무나 그때 도입되어 각종 구조개선 작업에서 이용되던 ABS(Asset Back Security)관련 자문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처신에 밝지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했던 탓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이후로 공인회계사의 길로 들어선 후 벌써 21 년째 이전가격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 일이 나에게서 일생의 천직이 되어 버렸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하고 싶어하지 않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직업적인 희소성이 생겼다는 것이 인생의 묘미인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와는 너무도 많이 변화하여, 세법에서도 변방에 불과했던 국제조세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법인세법 52 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국내관계사거래에서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후 “국조법”)에서 국외특수관계사 거래를 다루는 이전가격은 생소한 분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이 높은 세율이나 외환관리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이익이전(profit shift)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이전가격관리를 합의¹하여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세제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벌써 20 년 전 옛날 일이 되어버린 2000 년대 초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전세계에 나가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될 지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그간 한국과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이전가격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베트남은 이전가격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같은 동남아권 국가인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도 이런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특히 과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시작단계로 과세행정의 집행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자국내 외자기업투자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계속 국가의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 자체의 GDP 대비 외자기업들의 수출입금액의 비중이 2016 년 기준 1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1.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한 동향

최근의 베트남 언론에서 수집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베트남 총리,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철저 조사 지시 (2018.07.27)²

베트남 총리(Nguyen Xuan Phuc)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FDI)의 이전가격 및 세금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재무부(MoF)와 세무총국(GDI)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 중략...재정부(MoF)는 장기적으로 손실 보고를 하는 다수의 외국계투자기업(FDI) 베트남 투자 확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지적할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¹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글세라고도 불리우며 다국적기업들이 조세조약, 각국의 국제조세규정 및 세율차이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2015 년 11 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 개의 이행과제가 포함된 BEPS 대응방안을 승인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강화하였다.

² https://www.vinatimes.net/vn/v5_news_view/342780

B. 하노이 세무국, '이전가격' 정밀조사 진행 예정 (2020.01.18)³

지난 1월 5일 하노이 세무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주요 진행 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 년째 적자를 신고하면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FIE)과 이전가격 거래로 의심되는 비즈니스를 수행한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C.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통합 시스템 개발 (2019.12.18)⁴

베트남 각 지방 당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구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탈세 방안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FIE)들의 세금 납부 회치 또는 탈세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강화해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 이전가격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 성향 조정 등 (2020.11.16)⁵

베트남 정부가 지난 6/24일 발표한 시행령 132/2020/ND-CP에서는 건전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최저 투자자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진행되는 263개 업체를 점검해 5,250억동(약 2,26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과 체납액을 징수해 9조동 이상의 손실을 줄이고 과세소득 약 4조 1,900억동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³ https://www.vinatimes.net/vn/v5_news_view/399303

⁴ https://www.vinatimes.net/vn/v5_colum_view/396095

⁵ https://www.vinatimes.net/vn/v5_colum_view/444878

베트남 과세당국에 의하면 2019 년말까지 관계사 거래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83%가 관계사간 거래가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55%는 2019 년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앞서 향후에도 베트남 과세당국은 계속해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주요 과세당국의 관심사가 될 것임이 예상된다.

2. 개정 이전가격과세규정의 발포 (Decree No132/No 126, No.38)

상기와 같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베트남은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관련 유관규정을 정비하여 새로운 이전가격과세규정을 발포하였다. 당해 새로운 이전가격과세규정은 Decree No. 132/2020/ND-CP(이하 “Decree 132”, 2020년 12월 20일부터 유효하며, 2020년 법인세 과세소득분부터 적용)과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No. 38/2019/QH14 (이하 “LTA”)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및 당해 신규정 적용을 위한 이전가격 실행지침인 Decree 126/2020/ND-CP(2020년 10월 19일 발포)를 의미한다. (이하 “Decree 126”)

A. 신규정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의무

베트남이전가격 신규정 보고서작성 의무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함. ■ 베트남내 관계사거래만 발생하며, 해당 관계사간의 법인세율이 동일함과 동시에 세수혜택을 받지 않는 국내관계사간의 거래만 있는 경우 ■ 매출액이 5백억동(약 25억) 이하이며, 동시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3백억동((약 15억) 이하인 경우 혹은; ■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 및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도매 5%, 단순제조 10%,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 ■ 국가별보고서 – 외국계 회사 :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

적용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PS규정은 2017년부터 적용하였으며, 개정규정의 적용은 2020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적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거래신고서(TP Form)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
정상가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번째 백분위에서 75번째 백분위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 Form은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TP Form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기전까지 수정 제출 가능함. ■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할 것. ■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2개월내 작성 후 제출 ■ 이전가격 자료는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예비조사 및 검토시에 제출요청 받은 문서는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연장가능)

B. 신규정 개정사항 요약

종전규정과 비교하여 수정된 사항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신규정(Decree No. 132, 126, LTA) 수정 요약
특수관계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 형식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과세기간에 기업 출자 자본의 25% 이상을 양도하거나 수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과세기간에 기업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개인과 자본금의 최소 10% 차입, 대출 거래를 하는 경우

<p>상용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전 프로그래밍 된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사업조직에서 수집, 표준화, 저장, 업데이트 및 제공하는 재무 및 경제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 ■ 과세당국도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사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함.
<p>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한 총 이자비용 한도 EBITDA 30% ■ 이자비용=순이자비용(총이자비용-이자수익) ■ 비용 불인정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은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공제 가능
<p>정상가격범위 산정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범위: 35번째 백분위에서 75번째 백분위수로 정의 ■ 이전가격 조정은 중위값까지 조정함.
<p>국가별보고서 관련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모회사의 국가별 보고서가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절차를 통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음의 경우 해당 회계 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현지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 ■ 해외 모회사의 관할당국과 베트남 당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자간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베트남은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음) ■ 해외 모회사의 관할당국과 베트남 당국이 MCAA를 체결하였지만 AEOI를 정지 혹은 국가별 보고서가 베트남에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해외 그룹이 베트남에 2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어느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를 대신하여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관할 세무국에

	알려야 함.
과세당국에 대한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은 권한남용, 업무처리의 지연, 납세자 정보의 유용 등 행위를 금지함.(LTA 제6조) ■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상호 결탁하여 이전가격조정 및 탈세를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거나 연합하여서는 안됨 (LTA 제6조)
이전가격문서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관련 자료는 개정규정에서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세무조사시 요청된 시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종전에는 요청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삭제됨) ■ 참고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사전위험 조사 및 검토를 위한 자료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 연장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Decree 132 제18조 제6항).
이전가격과세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자신들의 증거 및 비교가능회사들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APA 신청서류 및 절차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A 신청서식 및 필요정보와 APA 갱신, 수정 및 철회의 방법 기록 ■ APA 신청 및 진행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쌍방 APA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외교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도록하고 최종APA의 승인은 총리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음.

3.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신규정 Decree132 에 의한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 베트남 세법에서는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을 우선적용하고 당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비교법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Decree 132 제 13 조 및 제 14 조)
- B. 비교가능성의 확대원칙에 대한 강조 (중전에는 구법제 6 조 제 3 항내용이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제 9 조를 별도로 구분함)
 - i. 비교가능회사의 최소 수 제한: 비교가능회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은 차이가 없는 경우 1 개로 적용할 수 있으나 중대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3 개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차이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최소 5 개 이상의 비교가능회사의 최소 숫자를 제안하고 있다(제 7 조),
 - ii. 비교가능회사의 적용연도의 제한: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검토대상회사는 3 개년 연속된 재무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 7 조), 비교가능성을 확대하여 1 년의 기간까지는 시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확대하여 비교할 수 있다.(제 9 조)
 - iii. 비교가능회사의 지역 제한: 베트남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나 기타지역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과 경제성장의 수준이 유사한 국가로 비교가능회사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다(제 9 조)

- c. 경제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구체화 및 과세당국의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용 (개정규정: 과세당국 내부데이터베이스(Secret Database)도 동시사용가능)
- i. 신규정에서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이전가격관리와 결정을 위해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조정시 반드시 LTA 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당국이 LTA 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당해 규정에서는 상업데이터베이스가 명확히 추가되고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향후 베트남 이전가격과세조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업용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정여부를 논의할 것이 기대된다. LTA 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1. 과세당국 데이터베이스와 2. 상업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종류이다.
- d.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영업손실 불인정
- i. 신규정 제 14 조에서도 구규정과 동일하게 납세자가 전략적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저부가가치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재고위험이나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무형자산사용과 관련된 매출이나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기능/위험수준이 낮은 제조 및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중국에서도 단순제조활동이나 단순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계마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E.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책임과 권한, 납세자의 권화에 대한 제시
(Decree 132 제 20 조)

- i. 신규정에서는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조정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소명권한을 명시함. 과세당국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자신들의 증거와 비교가능회사들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ii. 종전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세무조사에서 납세자들이 준비한 이전가격 보고서 등의 자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무당국의 내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사이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특별히 이전가격문서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과세당국의 비밀비교가능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폐해가 있었다.
- iii. 따라서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정 Decree 132 에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이전가격규정을 위배하여 과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경제분석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종전에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를 제한하고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조정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한국 및 중국 이전가격 규정과의 비교

한국과 중국에서의 이전가격방어에 관련한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은 이전가격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과세당국에서의 적용상의 혼란을 그대로 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일선에 있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가 아직 없어서 여러 적용상 난맥을 보이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A. 국내비교가능회사의 선호

베트남 이전가격규정은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규정과 비교하여 적용세제상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한국 내에서도 1998 년부터 2000 년초까지의 초기시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국 국세청도 당시 전통적인 접근방법(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의 선호 경향과 국외비교가능회사를 배제하고 국내비교가능회사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현재의 베트남 과세당국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과거 심판례에서는 한국과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시장에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해서는 비교가능하다고 인정하였는데 당해 내용이 금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이전가격규정 Decree132 에서도 경제발전단계등이 비슷한 해외의 비교가능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이전가격실무에서도 중국내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선호가 과거에는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중국과 유사한 경제상황에서의 비교가능회사를 이용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B. 비밀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의 사용

- i. 베트남 이전가격 신규정은 여전히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Secret Comparable, Government database)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과거 이전가격적용초기 한국에서도 일부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행정심판 등에서 사용을 금지함으로 인하여(심사법인 2002-101, 2005.05.30)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된 것과 유사하다.

- ii.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은 납세자로부터 맹렬한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사전에 이전가격과세위험을 관리하여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박탈하고, 과세당국이 제시한 정상가격범위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재검증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 iii. 이전가격세제가 정착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익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과세로 인한 APA(사전가격합의)나 MAP(상호합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당국이 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여 조정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과세당국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정상가격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 경제분석을 재 실시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 iv. 상기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과세당국도 납세자가 작성한 이전가격문서의 작성이 부실하거나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과세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과세조정은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과세당국의 경우도 세무당국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한 이전가격조정을 관련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2008 년 본격적으로 이전가격을 시행한 시행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내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과세 조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c.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의 기타특징
- i. 문서화(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강제하고 있으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고, 고정된 의무제출기한이 없으며, 문서화를 미비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납세자들이 문서화 작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세무조사에서는 작성된 이전가격문서 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는 중국 이전가격규정과 유사하나 중국은 지역별로 이전가격문서를 법인세신고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명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제출의무와 미제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이하다.

ii.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의 적용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1. 베트남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확한 이전가격신고 및 문서화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지연납부일에 따라서 가산이 된다.
2.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이전가격조사 조정의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납부불성실 가산세(1 일 1 만분의 3, 연 10.95%)와 함께 적용이 되므로, 납세자는 이전가격조정에 본세와 함께 30% 이상의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전가격문서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 규정과도 다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지연납부의 경우(1 일 1 만분의 5, 연 18.25%)와 달리 낮은 이자율(인민은행 대출기준이자율, 2019 년도기준 연 3~4%)을 적용하도록 하는 중국의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3.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과세실무상 납세자가 소득을 이전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세제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베트남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가산세 적용은 향후 수정 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이전가격과세시 상호합의 제기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가 없어서 분쟁발생시 이중과세를 사전에 회피할 수 없는 점

1.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이전가격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호합의 제기로 인한 징수유예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사항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에서는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상호합의를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과세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한국의 경우 이전가격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조사에 의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제기하여 사전에 세금납부와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상대방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에 소재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면, 반드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향후에 한국과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사후에 해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베트남의 개정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이전가격 세제가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의 일환으로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산업의 가치사슬이 중국에서 기타 미국 우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 중국에서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집중하였던 우리나라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투자증가의 추세는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더구나 베트남은 2019 년 1 월 14 일부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2020 년 11 월 15 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유럽연합(EU)과 FTA, 2021 년 1 월 1 일 영국과의 FTA 체결 발효를 하여 국제교역의 중심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를 가장 중요한 법인소득세의 세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특별히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나라기업들은 이전가격 등 과세위험의 관리를 관계당국과의 관계 강화와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미성숙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정과 논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경제분석을 통한 이전가격 관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전가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